

#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류재성 | 계명대학교

본 논문은 정책선호 형성과정에서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의 역할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보수-진보 이데올로기는 정책 선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수-진보 이데올로기의 정책 선호 형성에 대한 영향은 정치지식 정도에 의해 어떻게 변이되는가? 요컨대 본 연구는 정치이념-정치지식-정책선호 사이의 일련의 인과연쇄(causal chains)를 정치지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경험적 검증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정치이념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일정한 해석을 제공한다면, 정치지식은 정보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은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정책선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연계된 역할을 한다. 정책선호는 결국 정치이념에 따른 개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지만, 그것은 정치이념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해당 개별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변이한다. 그 변이의 방향은 정치지식의 정도에 따라 선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주제어:** 정치지식, 정치이념, 프레임링, 매개효과, 정책선호

## I. 서론

최근 한국에서의 정치과정은 갈등과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매우 빈번히 정치적 교착에 봉착하고 거버넌스의 위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이념에 따른 일종의 '진영논리'는 예전보다 강화된 듯 보인다. 정치이념적 성향에 따른 편가르기 와 이슈 프레임링(issue framing)이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여전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이념은 새로운 정치 및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B000042009). 심사자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 드린다.

로 그러나 이전보다 강화된 영향력을 가지면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사회의 정치적 논란 혹은 논쟁에는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특징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보다 빈번히 그것의 교착 및 증폭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당을 포함한 정치엘리트들의 사고 및 행태의 관습성이다. 지구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은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거버넌스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정치는 좀처럼 이념적, 정파적, 지역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시각 및 실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새로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적 이슈가 형성되고 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은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 한 기성 정치행위자의 '통제' 영역 바깥에서 진행되는 듯이 보인다. 개인들은 매우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여론형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반면 기성의 언론 및 정치 집단들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따라잡기에 급급하다.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강한 불만은, 그래서, 기존 미디어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소통의 통로를 통해 증폭된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소통방식이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예증한다. 이 매우 분산적인(niche cast) 정보 전달 및 여론 형성 통로는, 그러나, 매우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작동하며 그 효과는 폭발적이다. 소위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s)다.<sup>1)</sup> 3대 일간지 모두의 발행부수가 200만 부 정도인데 나꼼수의 다운로드수는 회당 600만 건을 넘어선다고 알려져 있다. 나꼼수는 포드캐스트(pod: person on demand cast)라는 방송의 형식, 일방적 정치 편향(혹은 단순화된 일관성), 과도한 비속어의 사용 등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형성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슈의 변환이다. 복지, 환경, 인권, 교육, 문화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들이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로 진입해 있다. 이들 이슈들은 기존의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이념적 공간에서 논의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선 정치적, 이념적 논리와 더불어 감성에 기초한 소통과 공

1) 눈덩이 효과는 일반적으로 미미한 시작에서 매우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지만, 언론학 등에서는 YouTube,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인 관심의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감의 능력이 요구된다. 정치적 해석/시각, 세계관, 정책에 대한 정연한 요약(summary of policy positions) 혹은 정치적 태도 및 선호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준(political anchor)으로서의 보수-진보의 정치이념은 사회적 균열구조의 역사적 반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부딪히며 새로운 내용 및 '감성'을 획득해 가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일종의 '합의이슈'(valence issue)화 되면서, 복지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과 범위, 그와 관련된 문화적 코드가 문제가 될 뿐이다.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유권자의 정보수용 방식 및 태도, 정책선호 결정과정에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개인 및 대중은 기존 정당 및 미디어와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틀 지워진 '이념적 프레임'(ideological framing)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되면서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sup>2)</sup> 그 변화의 방향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탈 집중화 및 다원화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탈 집중화 및 다원화는 '진실(혹은 사실)'에 대한 권위 역시 탈 집중화, 다원화 시켰으며, 이것은 역설적으로 '코드화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가공된' 진실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킨다. '사실'과 '주장'의 경계는 이념적인 프레임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논쟁은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주장과 주장의 격렬한 부딪힘으로 진행된다. 대중들은 자기 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주장 혹은 프레임에 내재된 이념적 방향성(ideological spin)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부차적이다. 요컨대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프레임의 영향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둘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의 정보 수용 방식 및 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정

2) 예컨대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사살됐을 때,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유명 칼럼니스트 페기 누난(Peggy Noonan)은 미국 정부가 언론에 제공한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거짓·합성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왜곡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A가 참이라 하는 순간, 세상 사람 절반은 A가 거짓이라 말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믿어버리게 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6/201201060153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6/2012010601538.html)에서 재인용.

보 생산 채널의 다원화와 탈 집중화는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가능케 하는 한편으로, 특정한 해석과 평가에 대한 집단동조화 현상 역시 강화시킨다. 유사한 신념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집단화가 일상화되고,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념의 극단화가 진행된다. 자극적인 정보는 이러한 집단화, 동조화 속에 강한 전염성(viral effects)을 가지고 전파되어 간다. 소위 정보전염병(infodemics) 현상은 값싼 정보 획득 비용과 그것들의 빠른 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프레이밍을 수단으로 하여 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정보전염병 현상은 정보의 사실성이나 객관성 보다는 프레이밍된 정보의 시의성(recency), 현저성(saliency), 대중적 관심환기정도 등에 좌우된다. 요컨대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프레이밍된 정보일수록 정보전염성은 강하고 빠르게 나타난다(Gamson 1992; Nelson, Oxley and Clawson 1997; Nelson 2004; Druckman 2004).

셋째, 정보 수용, 해석, 평가에 있어 (정치이념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정치지식이다. 공공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지식은 성공적인 민주정치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다.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각성된 시민(enlightened citizenry)의 자기결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지식은 일반적으로 정치이념 및 정당일체감 등 개인의 정치적 정향(political predisposition)과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를 매개하여, 전자의 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정치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정향을 일관된 정책 선호를 통해 드러낸다는 것이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89; Zaller 1990; Luskin 1989). 또한 정치지식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며,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선택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u and Redlawsk 1997, 2001). 요컨대, 정치지식은 정치이념에 따른 정책선호 형성을 강화하며 일관된 정책선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보수-진보 이데올로기는 정책 선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수-진보 이데올로기의 정책 선호 형성에 대한 영향은 정치지식 정도에 의해 어떻게 변이 되는가? 요컨대 본 연구는 정치이념—정치지식—정책선호 사이의 일련의 인과연쇄(causal chains)를 정치지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이념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일정한 해석을 제공한다면, 정치지식은 정보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은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정책선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연계된 역할을 한다. 정책선호는 정치이념에 따른 개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지만, 그것은 정치이념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해당 개별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변이한다. 그 변이의 방향은 정치지식의 정도에 따라 선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먼저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이 정치적 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 정치지식의 역할을 데이터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존 이론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의 『국경인식조사』<sup>3)</sup>임을 밝힌다.

## II. 기존 이론의 검토

### 1. 정치이념의 역할

유럽의 경우, 정치이념은 계급적이다. 정치이념 및 정당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상부구조의 요소다(Lipset and Rokkan 1967).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이나 정책선호의 결정 기준은 많은 경우 계급에 기반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계급적 기반-정치이념-정당이념이 규칙적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보인다.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등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집단이익의 계급적 반영이라는 경향이 이전 보다 약화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유럽 정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의 결정요인은 계급 및 그에 기초한 정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Crewe 1993).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그것의 정치에 대한 영향이 약한 편이고, 일종의 이념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국가인 이유로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이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다. 정당 배열 역시 정치이념적 차원에서의 차이 보다는 정부의 역할 및 그 역할의 범위에 대한 차이에 기초한다. 때문에 정치이념의 영향력은 유럽에서와 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Converse 1964; Campbell et al. 1960). 다만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높고, 보수성이 강한 유권자

3) 『국경인식조사』는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는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bramowitz and Saunders 1998; Hetherington 2001; Schreckhise and Shields 2003; Fiorina 2004), 정당 내 정치이념적 응집도 및 통일성(ideological cohesion and homogeneity)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다만 미국 유권자에게 있어 정당 선호와 정치이념의 연관은 여전히 유럽 유권자에 비해 낮으며, 그 연관의 근거 역시 계급적(사회 경제적)이기 보다는 논리적, 심리적, 사회적이다.

미국 유권자의 정치이념은, 따라서, 계급적(혹은 계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종합, 요약한 정치정향(political predisposition)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유착(psychological attachment)에 의해 형성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중심으로 그에 부속하는 일종의 부차적 태도다. 따라서 주로 연방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구분한 미국의 진보-보수가 갖는 정치적 선택에서의 규정력은 정당일체감에 비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ton 2002).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은 ‘분단’과 ‘권위주의(혹은 독재)’라는 특수 상황에 의해 순수한 논리의 체계로서 형성되거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 ‘반공’을 중심으로 집권세력의 체제수호 혹은 안정 논리가 추가된 한 축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요구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전자가 보수 이데올로기를, 후자가 진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왔다. 요컨대, 한편으로, 경제적·물질적 가치의 배분에 의해 이념적 경계가 생겨난 유럽과 달리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민주-반민주를 축으로 한 이념적 분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은 경제 영역에서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 및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도 못했다.<sup>4)</sup>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이념은 반공을 넘어서는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정당 중심 정치이념의 보조체계로서 기능해 왔다. 반공은 내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보수세력의 반공은 권위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유력한 동원이념일 뿐이었다. 반공과 체제안정의 등식화는 정책 내용 및 방향 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반공’ → ‘정치적 안정’ →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 →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상 논리고리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이념은 미국의 정치이념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사안에 대한 선택의 준거를 제공하지도 못한다(김무경·이갑윤 2006; 윤성이 2005). 요컨대 강정인·이지윤(2003)이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의

4) 강원택(2003) 참조.

보수-진보의 대립은 사안별, 쟁점 별로 뒤죽박죽 된 모습을 보여 왔고,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세력은 있어도 보수이념과 진보이념은 없는 형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은 몇몇 이슈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 및 자주외교를 이슈로 하는 대미 관계에 대한 태도 및 북한에 대한 강·온의 태도, 경제적 차원에서는 재벌개혁, 노동정책, 복지정책과 관련된 태도,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환경, 교육 및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주요 이슈들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정책 및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의 하나로 남아 있으며,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의 ‘햇볕정책’이라는 반(反)보수적 접근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요컨대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정책에서의 선호차이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간결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경제적 차원의 보수 진보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재벌개혁, 노동 및 복지정책 등 전통적인 이슈 영역과 함께 최근의 한미FTA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에서 보여 지듯이 세계화 혹은 자유무역과 관련한 이슈에서 두드러진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환경, 교육, 여성 및 이주민(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의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의 이념적 차이만큼 크지 않으며 결정적인 규정력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 2. 정치지식의 역할<sup>5)</sup>

정치지식은 정치이념과 같은 개인의 태도, 가치, 정치적 정향과 정치적 선호 형성 사이에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기능한다(Luskin 1987).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그것을 해석,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성에 일관되게 근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열성적으로 정보를 검색, 취득하지만,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는 분석적이며 비판적이고, 동시에 일정한 이념적 지향(anchoring) 혹은 편향(bias)을 갖는다(Lodge and Hanmill 1986; Lodge and McGraw 1995; Taber and Lodge 2006).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새로운 정보의 검색, 취득에 무관심하거나 덜 열성적이며, 많은 경우 정치적 준거 및 배경 지식, 혹은 일

5) 아래 내용은 류재성(2010)에서 직접 인용하였음.

관된 정치적 태도 및 신념체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해석, 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분위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거나 지배적인 여론 혹은 자신이 접한 정보만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Zaller 1991). 요컨대 대중들의 정치지식 수준은 새로운 정보를 검색, 취득, 해석, 평가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결정 및 선호 형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적 덕성과 (공동체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사건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지 및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선호를 형성, 표출함으로써 여론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해야) 한다. 관용이나 애국심 등의 규범적 덕성을 제외하면, 민주적 의사결정 및 입법을 위한 시민적 능력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각, 공적인 사건들에 대한 인지, 정책대안들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등 인지적 자질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인지적 자질의 핵심은 개인들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치지식이다(Converse 1964; Luskin 1987; Kukilinski et al. 1998; Kuklinski 2002;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상당한 정도의 정치지식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지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이해를 정치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의지가 있다.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는 정치적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사실 및 결정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인지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Anderson, Tilley, and Heath 2005).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은 자신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인지, 그것들의 정치적 실현을 위한 의지와 실행을 가능케 하는 정치지식을 소유한 시민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요컨대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소유한 다수의 시민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지식은 정당일체감이나 정치이념과 더불어 개인들의 정치적 결정 및 정책선호 형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Zaller 1992).

인지적으로 정치지식은 새로운 정보의 의미화 및 해석, 저장 및 상기 등 정보처리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Krosnick and Kinder 1990; Bargh 1994, 1999).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넓은 맥락 및 높은 추상 수준에서 의미화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들을 상기 활용하여 선호를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처리를 통한 의사결정 및 선호형성은 일관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게 하며, 가치 및 신념 체계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한다.

정치지식은 또한 시민적 태도 및 행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정치지식은 정치적 관용 등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 및 규범에 대한 인지 및 수용을 포함하며, 정치지식 수



준이 높은 개인들은 이러한 가치 및 규범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Gibson 1992; Gilens 2001). 둘째, 정치지식은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투표참여와 같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적 태도는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로 이어진다(Neumann 1986; Leighley 1991). 셋째, 정치지식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및 신념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각성된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 및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각성된 이해관계란 정치과정, 주요 정책결정자 및 주요 이슈의 사회, 정치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미국 유권자 및 서구 유럽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의 정치지식 관련 연구들은, 그러나, 한국 유권자를 상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류재성 2011). 한국사회의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정치지식의 인지적 차원에서의 일반적 역할을 왜곡 혹은 방해할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정당일체감이나, 정치이념, 정치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 등 정치심리학 혹은 선거정치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의 역할은 한국사회 및 정치에서 역시 그 설명력을 검증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 3.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관계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연구는 컨버스(Converse 1964)에 의해 이루어 졌다. 컨버스는 이념, 즉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신념체계’(belief System)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신념체계는 특정 형태의 집적연관(constraint) 혹은 기능적인 상호의존성(functional interdependence)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고 및 태도 요소들(idea and attitudes elements)의 배열 혹은 구성을 가리킨다. 컨버스는 신념체계를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그것들은 이념적 사고 모드의 적극적 이용(active use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 이념적 사고 모드의 인식 및 이해(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 사회집단을 통한 이념(social group concepts via specific social groups and politicians), 시의적 사건을 통한 이념(nature of times concepts via particular events) 및 내용이 없는 이념(no issue contents)이다. 이러한 분류는 신념체계를 이데올로기적 개념화 수준(levels of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으로 구분한 것으로 신념체계에 대한 양태적 구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수준에 대한 인지적, 질적 구분이기도 하다.

러스킨(Luskin 1987)에 따르면, 신념체계는 개인의 정치적 인지(능력)(political cognition)과 더불어 그것들이 연관, 집적된 정도(political cognition, together with those with which they are constrained)를 의미한다. 신념체계는, 따라서, 다음의 3차원 — 즉 크기(인식 수, number of cognition), 범위(정치세계에 대한 포괄 정도, the coverage of the political universe) 및 조직화(집적연관, constraint) — 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세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인식 수는 다양한 정치세계를 포괄하지 않고는 확보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일정한 체계 속에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보유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높은 수준의 조직화는 많은 인식 수나 다양한 정치세계를 포괄하지 않는다면 필요치 않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많은 양의 정보가 조직화된 정도에 따라 신념 체계가 구분되며, 이념적 사고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세련도 및 정치지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이념은 정치지식을 포괄하며, 다만 정치지식 수준이 나타내지 않는, 좌·우의 방향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은 밀접히 상호 연관된 개념이다.

〈표 1〉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개념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다. 쾨버스의 개념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이념적 개념화 수준 — 즉 이념적 사고 모드의 적극적 이용(active use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 이념적 사고 모드의 인식 및 이해(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 — 을 가진 유권자는 네

〈표 1〉 이데올로기적 개념화 수준(Levels of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 in Politics)의 국가별 비교

(단위: %)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고 1	5(2.5)*	1	2	5	4
2	6(9)	6	6	12	11
3	14(42)	9	17	17	25
4	16(24)	17	22	25	27
저 5	59(22.5)	67	53	41	33

출처: Klingemann(1979).

\*괄호 안은 Converse(1964).

덜란드(17%)가 가장 많으며, 미국의 경우 11%이고, 영국의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슈를 가지지 않는 내용(no issue contents)의 최저 수준의 정치적 신념체계를 가진 유권자는 영국의 경우 67%에 이르며, 미국의 경우는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화 수준과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혹은 정치지식은 인식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지식을 인식의 조직화 혹은 집적연관을 제외한 인식의 수(혹은 양)으로 좁게 정의한다면, 정치지식은 이데올로기적 개념화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데올로기적 개념화 수준에서 조직화 및 집적연관을 제외하고, 그 방향성만을 고려한다면 보수-진보 혹은 좌-우의 정치이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 중심의 정치이념은 후보선택과 같은 정치적 선택과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주요 독립변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정치에서의 정치이념과 미국정치에서 정치이념이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선택과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모두에서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치지식은 이론적으로 정당일체감이나 정치이념, 그밖에 인구통계학적 변수군(demographic variables) 및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등의 정치심리적 변수군(psychological variables)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기능한다(Luskin 1989). 말하자면 정치이념, 소득수준 등의 후보선택 등의 결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서 더 크거나 혹은 더 작다는 것이다.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보수-진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이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인 이슈에서 보수-진보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이해한다. 따라서 정치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치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역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정치이념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선택 및 선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선택 및 정책 선호에 있어서 정치이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결핍 혹은 부족은 유권자 자신의 투표 선호를 표출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 혹은 선호 형성의 일관성을 결여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유권자가 강력한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이념성향의 정책선호 및 후보자 선호로의 전환은 적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Palfrey and Poole 1987). 요컨대 이념성향의 선호형성 능력은 체계화된 정보의 양(정치지식)에 의해 매개된

다. 그러나 그 역은 아니다. 즉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모두 강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바탕 하여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처리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지식이 높은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보다 신중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지식(prior knowledge)과 일치하는 정보뿐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노출하고 정보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자신의 기존 지식과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Fiske et al. 1983).

이상의 논의에서 밝힌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밀접한 상호관련성 및 그것들의 정책선호 및 투표선택에서의 독립적 및 매개적, 따라서 종합적인 영향력의 효과는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아래에서의 논의는 그 연구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 III.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 측정 및 분석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을 서베이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 연구는 측정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연구 주제의 제한으로 인해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과 그것이 기타 주요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지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간접적인 방식의 측정으로, 교육수준 및 미디어 이용도 등을 대용(surrogate)으로 사용하거나, 설문담당자가 응답자의 정치와 공적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 수준을 점 척도로 판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Zaller 1996). 이러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 역시 척도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상당한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mith 1989;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미디어 이용의 경우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지식을 구분하지 않으며, 설문담당자에 의한 평가의 경우 주관성의 개입이라는 문제가 있다.<sup>6)</sup>

직접적인 방식의 정치적 지식의 측정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첫째는 특정 이슈에 있어서의 정당과 후보자의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나 여부

6) 이하의 내용은 류재성(2010)에 근거함.

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을 묻고, 이때 민주당의 입장을 공화당 입장의 왼쪽 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올바른 이해로 간주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주요 정치 행위자, 주요 정치제도 및 주요 정책 현안 등 정치적 사실(political facts)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Luskin 1987; Lodge, McGraw, and Stroh 1989; McGraw and Pinney 1990; Smith 1989; Krosnick and Milburn 1990; Zaller 1990, 1992; Price and Zaller 1990). 예컨대 주요 정치행위자에 대한 설문은 경우 특정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묻거나, 반대로 특정한 수행하고 있는 공직을 묻는다. 정치제도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상원의원의 임기를 묻거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묻는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은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나 뉴딜(New Deal)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현재 실업률 혹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지 여부, 복지나 국방 관련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인지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척도로서의 신뢰성 및 효용성을 상당한 정도 확보하고 있는 측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즉 일반적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과 이슈 특수적인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합산한 값을 이용 한다. 일반적 정치지식 측정문항은 국무총리 인지 여부, 대통령 임기 인지 여부, 미국 대통령 이름 인지 여부, 러시아 대통령 인지 여부, 국회다수당 인지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 및 정답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46.5%) ②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83.8%) ③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95.4%) ④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29.5%) ⑤현재 국회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93.9%) 특수적인 정치지식 문항은 이주노동자 수에 대한 인지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 및 정답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⑥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45.3%).<sup>7)</sup>

조사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미국 대통령 이름(95.4%), 다수당(93.9%), 대통령 임기(83.8%), 총리 이름(46.5%), 한국 거주 이주 노동자 수(45.3%), 러시아 대통령 이름 순(29.5%)으로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그 역이 질문의 난이도 순이 될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 문항 모두의 정답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1%였으며, 35.4%의 응답자가 3개 이하의 항목 정답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11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140만 명가량이다.

〈표 2〉 정치지식 측정값 분포

정답 수	빈도	유효 %
1	11	1.1
2	87	8.7
3	256	25.6
4	323	32.3
5	222	22.2
6	101	10.1
계	1,000	100.0

〈표 3〉 정치지식 요약

정치지식 수준	정답 수	빈도	유효 %
저	1, 2 & 3	355	35.4
중	4	323	32.3
고	5 & 6	323	32.3
계		1,000	100.0

전체 응답자의 정치지식 측정값 평균은 3.96이며, 표준편차는 1.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개 항목 간 알파(Cronbach's alpha) 값으로 나타난 설문항목간 측정의 신뢰도(reliability) 혹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0.353이며, 이주노동자 문항을 제외한 5개 항목 간 알파(alpha) 값은 0.444인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정치지식 수준 변수는 각각의 설문문항의 정답을 1로 하고, 그 밖의 경우, 즉 오답이나 무응답은 0으로 한 후, 6개 항목에서의 정답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은 <표 2>의 분포를 바탕으로 정치지식 측정값을 등간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치지식 수준을 저, 중, 고로 3분류한 결과다. 분류의 기준은 <표 2>의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32.3퍼센타일에 속하는 응답자를 '고', 32.3 이상 64.6퍼센타일에 속하는 응답자를 '중', 하위 35.4퍼센타일에 속하는 응답자를 '하'로 분류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분석결과의 단순성 제고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3분할된 정치지식 수준을 이용하도록 한다.

8) 측정변수들 사이의 신뢰도는 통상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일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 측정값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측정의 신뢰성을 그 자체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된 다른 변수와의 연관성을 통해 측정값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예증할 수 있겠다. 정치지식은 공식적인 교육연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을 갖지만 그것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Luskin 1989). 러스킨(1989)에 따르면, 정치지식은 정치에 관심(혹은 동기, motivation), 정치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opportunity), 정치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ability)<sup>10)</sup> 모두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공적인 교육연함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년 경력의 50대 택시기사와 20대 후반의 대학졸업 대기업 신입사원의 정치지식 수준은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를 졸업한 동기들 가운데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정치지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부 기자의 정치지식 수준과 요식업 분야 기업 간부의 정치지식 수준에서도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것이다.

공적인 교육연함이 차이가 나거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지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능한 것은 러스킨이 제시한 기회 요인의 작용 때문이다. 특정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이 정치 관련 정보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더 빈번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노출 및 (대화를 통한) 정보소지 기회에 있어 차이가 정치지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역시 정치지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지만 그 자체가 정치지식 수준을 결정하는 단일 변수는 아니다. 정치지식의 축적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또한 관심이라는 ‘태도’의 실제적인 정보의 획득

9) 미국 유권자의 낮은 정치지식 수준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정치지식이 측정된 이래 미국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기회 및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와 정보비용의 감소 등 정치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베넷(Bennet 1993)의 연구에 따르면, 1967년에 측정된 미국 대중의 정치지식 수준의 평균값은 1.71이었는데, 1987년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정치지식 수준의 평균값은 1.48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80; p < 0.01$ ).

10) 기회(opportunity)는 신문열독률, 공적 교육, 직업 등의 변수, 동기(motivation)는 정치적 관심 변수, 능력(ability)은 인지 능력(intelligence) 변수를 정치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시켰으나, 이중 인지능력을 IQ 테스트 점수로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러스킨의 주장은 이설로 존재한다.

〈표 4〉 집단 별 정치지식 평균

		평균	표준편차	N
직업	기술공/준전문가	4.90	1.24	8
	전문가	4.48	1.46	10
	사무종사자	4.34	1.08	200
	기능원/기능종사자	4.23	1.14	42
	무직/무응답/기타	4.19	1.11	48
	장치/기계조작/조립	4.03	0.80	15
	입법공무원/관리자	4.00	1.44	2
	자영업	3.95	1.21	184
	서비스 종사자	3.93	1.09	61
	학생	3.89	1.07	64
	단순노무	3.84	1.25	32
	판매종사자	3.71	1.11	74
	농/임/어업	3.71	1.10	31
	전업주부	3.63	1.11	229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	4.31	1.09	12
	대학교	4.23	1.12	299
	전문대학	4.08	1.19	127
	고등학교	3.94	1.10	401
	중학교	3.50	1.12	82
	초등학교	3.23	1.20	72
정치관심도	매우 관심 있다	4.85	0.95	31
	관심 있다	4.25	1.12	380
	관심 없다	3.85	1.10	481
	전혀 관심 없다	3.16	1.02	109
뉴스접촉 빈도	거의 매일	4.07	1.14	742
	1 주일에 서너 번	3.73	1.17	183
	1 주일에 한두 번	3.40	1.04	59
	1 주일에 한번 미만	3.43	0.81	15
	전혀 안 접함	3.00	0.00	1
합계		3.96	1.15	1,000



득과 축적이라는 ‘행위’로의 전환에는 또 다른 변수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표 4>는 집단 별 정치지식 평균 및 표준편차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기술공/준 전문가, 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정치지식 수준이 높으며, 전업주부, 농/임/어업, 판매종사자, 단순노무 순으로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정치지식과 비교할 때 전문가( $t = 2.387$ ;  $p = 0.018$ ), 사무종사자( $t = 6.738$ ;  $p = 0.000$ ), 기능원/기능종사자( $t = 3.253$ ;  $p = 0.001$ ), 자영업( $t = 2.847$ ;  $p = 0.005$ ), 서비스 종사자( $t = 1.932$ ;  $p = 0.054$ )의 정치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t = 1.693$ ;  $p = 0.092$ ), 농/임/어업( $t = 0.387$ ;  $p = 0.699$ ), 단순노무( $t = 0.981$ ;  $p = 0.328$ )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정치관심도, 뉴스접촉빈도에 따른 정치지식 평균 역시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과 조응한다. 즉 교육수준, 정치관심도, 뉴스접촉빈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과 이들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교육수준 0.23, 정치관심도 0.31, 뉴스접촉빈도 0.18로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킨의 정치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의하면, 정치관심도는 동기요인(motivation)에 해당하고, 뉴스접촉빈도 교육정도 및 직업 등의 변수는 기회(opportunity)에 해당한다. 이들 변수들과 측정된 정치지식 값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것은 측정된 변수의 유효성(validity)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정치이념

### 1. 이항 상관관계

한국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치지식 사이의 관계는 기존 이론을 지지한다.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즉,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역시 0.095로 높지는 않으나, 0.01의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5>는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으로 보수-중도-진보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의 분포를 보여준다.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유권자 중에 상대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표 5〉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 수준의 교차분석

정치이념	정치지식 요약		
	저	중	고
보수 N=341	37.5% 128	31.4% 107	31.1% 106
중도 N=477	37.1% 177	33.3% 159	29.6% 141
진보 N=181	27.6% 50	30.9% 56	41.4% 75

〈표 6〉 정치이념에 따른 정치지식 평균

정치이념	평균	표준편차	N
보수	3.88	1.16	341
중도	3.92	1.15	477
진보	4.23	1.12	181
합계	3.96	1.15	999

다. 진보 유권자의 41.4%가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반면, 보수 유권자의 31.1%가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6>의 보수-중도-진보 유권자의 정치지식 측정값의 평균이 보여주듯, 보수 유권자의 정치지식 평균값은 3.88인 반면 중도 및 진보 유권자의 정치지식 평균값은 각각 3.92 및 4.23으로 조사되었다. 즉 보수 유권자 보다는 중도 유권자, 중도 유권자 보다는 진보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높다. ANOVA 검증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정치이념 집단 간 정치지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F = 6.298, p = 0.002$ ).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지식 평균값의 차이(0.35% 포인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 = 3.357; p = 0.001$ ).

## 2. 정책선호형성에서의 역할: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사례분석

이하에서는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의 정책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를 예로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하의 분석 방법은 이후 제시되는 여타 이슈에 대한 태도

〈표 7〉 정치이념에 따른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정치이념		
	보수	중도	진보
탈미자주외교	11.8	14.5	26.1
현상유지	44.7	49.6	38.3
한미동맹강화	43.2	36.0	35.1
합계	100	100	100

에서도 실행되었으나, 결과 제시는 생략하고, 보다 요약된 형태의 다른 방법을 통해 제시 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 선호는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설문에 대해, ‘탈미자주외교’를 지지한 응답자는 15.7%, ‘현상유지’는 45.9%,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한 응답자는 38.2%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현상유지’를 제외한다면 ‘탈미자주외교’보다는 ‘한미동맹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표 7>은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다. 보수-중도-진보 모두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3.2%의 보수 유권자들이 ‘한미동맹강화’를 선호한 반면 35.1%의 진보 유권자들만이 ‘한미동맹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진보 유권자의 26.1%가 ‘탈미자주외교’를 지지한 반면, 보수 유권자의 11.8%만이 ‘탈미자주외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보수-진보의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선호는 기존의 발견과 다르지 않다.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한미동맹강화’를 가장 높게 지지한 반면(45.0%), 정치지식 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 유권자의 경우는 ‘현상유지’를 각각 53.1%와 46.3%로 가장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한미관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지식, 정치이념 및 기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다. 여러 통제 변수를 생략한, 모델 1의 회귀분석 결과는 정치이념

11)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한시적인 선호의 분포다.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여론분포에 대한 일종의 스냅샷(snapshot)이다.

〈표 8〉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정치지식		
	저	중	고
탈미자유외교	11.9	17.6	18.0
현상유지	53.1	46.3	37.0
한미동맹강화	34.5	36.1	45.0
합계	100	100	100

〈표 9〉 정치지식 및 정치이념의 한미관계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2.045	.117	2.299	.249	2.274	.284
정치이념	.104***	.034	.089*	.036	-.011	.058
정치지식	-.009	.023	-.021	.027	-.084*	.042
정치이념*정치지식					.044*	.022
정치관심도			-.026	.037	-.022	.038
학력			.007	.029	.006	.029
월평균 가구 소득			.014	.020	.012	.020
성별			-.025	.053	-.023	.054
연령			.033	.024	.032	.024

\*\*\*p &lt; .001, \*\*p &lt; .01, \*p &lt; .0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치이념이 진보-중도-보수로 변화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는 탈미자유외교-현상유지-한미동맹강화의 순으로 정책선호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지식은 한미관계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이념의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기타 변수의 추가로 약해지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지 않았다. 정치지식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교차변수(interaction term)을 추가한 모델이다. 이를

통해 정치지식의 정치이념에 대한 매개적 효과를 검증한다. 전술했듯이, 정치지식은 정치이념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정향의 정책선호에 대한 영향을 매개한다. 즉, 정치지식 수준은 정치이념의 정책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 수록 정치이념에 따른 일관된 정책선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모델 3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존 이론을 지지한다. 정치이념과 정치지식의 교차변수 — 정치이념\*정치지식 — 이 유의확률 0.048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의 독립적인 영향 역시 유의확률 0.046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정치이념을 통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이념의 독립적인 영향은 유의확률 0.85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과 정치이념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집단 별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행했다. 즉 정치지식 및 정치이념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정치이념 총 효과} &= \text{정치이념 직접효과} + \text{정치이념*정치지식 매개효과} \\ \text{정치지식 총 효과} &= \text{정치지식 직접효과} + \text{정치이념*정치지식 매개효과} \end{aligned}$$

보다 직접적으로,

$$\begin{aligned} \text{정치이념 총 효과} &= (\text{정치이념 회귀계수} * \text{정치이념 변수 값}) + (\text{정치이념*정치지식 회귀} \\ &\quad \text{계수} * \text{정치이념 변수 값} * \text{정치지식 변수 값}) \\ \text{정치지식 총 효과} &= (\text{정치지식 회귀계수} * \text{정치지식 변수 값}) + (\text{정치이념*정치지식 회귀} \\ &\quad \text{계수} * \text{정치이념 변수 값} * \text{정치지식 변수 값}) \end{aligned}$$

이를 진보와 보수, 정치지식 수준의 저-고에 따라 집단을 구별하고 각 집단에서의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sup>12)</sup>

12) 진보(1), 저 정치지식(1) 유권자의 정치이념 총 효과 =  $[-0.011]*(1) + [0.044]*(1)*(1) = 0.033$   
 진보(1), 고 정치지식(3) 유권자의 정치이념 총 효과 =  $[-0.011]*(1) + [0.044]*(1)*(3) = 0.121$   
 보수(3), 저 정치지식(1) 유권자의 정치이념 총 효과 =  $[-0.011]*(3) + [0.044]*(3)*(1) = 0.099$   
 보수(3), 고 정치지식(3) 유권자의 정치이념 총 효과 =  $[-0.011]*(3) + [0.044]*(3)*(3) = 0.363$

〈표 10〉 정치지식 및 정치이념 효과

정치 이념	정치지식	① 정치이념 직접효과	② 정치지식 직접효과	③ 정치이념* 정치지식 매개효과	정치이념 총 효과 (①+③)	정치지식 총 효과 (②+③)
진보	저	-0.011	-0.084	0.044	0.033	-0.040
	고	-0.011	-0.252	0.132	0.121	-0.120
보수	저	-0.033	-0.084	0.132	0.099	0.048
	고	-0.033	-0.252	0.396	0.363	0.144

정치지식 및 정치이념 간 매개변수를 포함했을 경우, 정치이념의 총 효과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정치이념의 총 효과는 진보의 경우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0.121인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0.033이었다. 보수의 경우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0.363인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0.099이었다. 더불어 정치이념의 효과가 가장 선명하고,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보수 유권자 중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며(0.363), 가장 낮은 집단은 진보 유권자 중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이다(0.033).

다른 한편, 정치지식의 총 효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보수 유권자에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으며(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진보 대 보수는 0.040 대 0.048,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진보 대 보수는 0.120 대 0.144), 정치지식의 총 효과는 진보-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서(진보의 경우 음의 총 효과인 반면, 보수의 경우 양의 총 효과), 진보 유권자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0.044 < -0.120) '탈미자유외교'를 지지하고, 보수 유권자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0.048 < 0.144) '한미동맹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보수 유권자가 진보 유권자에 비해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더 선명하게 '한미동맹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선호를 나타냄을 보여 준다.

진보(1), 저 정치지식(1) 유권자의 정치지식 총 효과 =  $[-0.084]*(1) + [0.044]*(1)*(1) = -0.040$

진보(1), 고 정치지식(3) 유권자의 정치지식 총 효과 =  $[-0.084]*(1) + [0.044]*(1)*(3) = -0.120$

보수(3), 저 정치지식(1) 유권자의 정치지식 총 효과 =  $[-0.084]*(3) + [0.044]*(3)*(1) = 0.048$

보수(3), 고 정치지식(3) 유권자의 정치지식 총 효과 =  $[-0.084]*(3) + [0.044]*(3)*(3) = 0.144$

이상에서 ( ) 안의 숫자는 변수 값이고, [ ] 안의 숫자는 회귀분석 계수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정치지식에 대한 이론적 리뷰에서 밝혔 듯이,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가 선명하게(혹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정책 선호의 방향이나 내용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정치지식은 정치이념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정향의 정책선호에 대한 영향을 매개한다. 즉 정치지식 수준은 정치이념의 정책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 수록 정치이념에 따른 일관된 정책선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V. 정치지식, 정치이념 및 정책선호: 회귀분석

이상의 기초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지식의 정책선호에 대한 매개적인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방식을 채택했다. 즉 한미관계를 포함한 기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이념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정치지식 수준이 다른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정치이념의 한미관계에 대한 정책선호 형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떤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집단 별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했다. 검증을 위한 가설은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정치이념에 의한 정책선호에 대한 결정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종속변수에 대한 같은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태도, 대북 핵 압박 정책에 대한 태도, 경제세계화에 대한 태도, 북미국가와의 FTA 체결의 영향에 대한 평가, 외국인 노동자의 3D업종 종사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한 평가. <표 11>은 정치이념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책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정치지식 수준이 각기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실행한 결과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태도 및 대북 핵 압박에 대한 태도 변수에서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에게 정치이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낮거나 중간에 속하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이념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상의 차이가 유의미한 정책선호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정치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정치이념 상의 차이가 정책선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 요컨대 한미관계 및 대북 관련 안보분야

〈표 11〉 정치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이념의 영향 OLS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분석대상: 정치지식수준**	B	표준오차	t	유의확률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저	-.021	.065	-.315	.753
	중	-.068	.057	-1.190	.235
	고	<b>-.194</b>	<b>.055</b>	<b>-3.530</b>	<b>.000</b>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태도	저	.051	.050	1.018	.309
	중	.004	.085	.046	.964
	고	<b>.161</b>	<b>.048</b>	<b>3.379</b>	<b>.001</b>
대북 핵압박에 대한 태도	저	.051	.050	1.018	.309
	중	.004	.085	.046	.964
	고	<b>.161</b>	<b>.048</b>	<b>3.379</b>	<b>.001</b>
경제적 세계화	저	0.20	0.54	.371	.711
	고	.027	.036	.767	.444
	중	<b>.075</b>	<b>.034</b>	<b>2.211</b>	<b>.028</b>
북미국가와의 FTA 체결의 영향	저	.000	.040	.011	.991
	중	.079	.041	1.925	.055
	고	<b>.064</b>	<b>.037</b>	<b>1.751</b>	<b>.081</b>
외국인노동자의 3D 업종 종사에 따른 경제영향	저	.049	.042	1.157	.248
	중	.003	.042	.075	.940
	고	<b>.077</b>	<b>.036</b>	<b>2.110</b>	<b>.036</b>

\* 정치이념을 독립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임.

\*\*정치지식수준 저, 중, 고의 집단별 N은 각각 353, 320, 321임.

정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는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만 나타났고, 그 밖의 집단에서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안보관련 정책에서의 태도 차이로 귀결되지 않았다.

경제분야에서 역시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 및 북미국가와의 FTA체결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경제적 세계화에 찬성하고 북미 FTA가 한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이념에 따른 차이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에 국한된다.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정치이념의 효과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에게만 나타났으며, 북미국가와의 FTA 문제에 대한 정치이념의 효과 역시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유권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3D 업종 종사에 따른 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역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 집단에서만 정치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안보 및 경제분야 이슈에 대한 정책선호에 있어서 정치이념이 미치는 효과가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보수와 진보 유권자의 정책선호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즉 일관되고 선명하게 나타나나 반면, 정치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차이가 정책선호의 차이로 전환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치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유권자에게 있어 정치이념은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정치이념의 정책선호로의 전환은 직접적이지 않다. 혹은 정책선호는 정치이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 VI. 토론

정책선호 형성에 있어 정치이념의 역할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이 정연한 정치철학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논리적 일관성 역시 결여하고 있지만, 정책선호 및 투표선택에 있어서 갖는 영향력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요컨대 정치이념은 정치적 선호, 정향 및 신념의 체계화 및 요약으로 정책선호와 투표결정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이끌어가는(anchoring)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정치이념이 응답자 스스로의 자기 판단 및 선택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정치이념의 신념체계로서의 역할의 강도 및 일관성이 변수에 반영되기 어렵다. 예컨대 스스로를 보수 혹은 진보라고 규정하는 청년 퇴임한 정치학 교수의 정치이념의 강도와 일관성이 20대의 그것과 같은 정도일 수 없으며, 이들이 정치적 이슈를 판단하고 선호를 형성하며 투표결정을 하는데 있어 같은 정도로 정치이념에 기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말하자면 스스로를 보수 혹은 진보로 규정하는 유권자 모두가 같은 정도의 강도 및 일관성을 갖고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의 정책선호와 투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컨버스(Converse 1964, 1969)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념적인 신념체계는 보수와 진보의 방향성 차원(directional dimension)뿐 아니라 그 체계화의 수준 차원(level of constraint dimension)을 갖는 복합개념이며, 여기서 후자는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혹은 political awareness) 혹은 정치지식과 등치될 수 있다. 즉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및 투표선택에서의 효과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전제하고 그것들 사이의 집적연관(constraints)의 정도에 의해 영향 받는다. 정치이념의 체계화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

자에 비해 선명하고 일관된 보수 및 진보의 선호를 형성 표출한다.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이론적 및 경험적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안보 및 경제관련 정책 이슈에서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 집단에서만 정치이념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에 따른 한미관계나 대북관계, 경제적 세계화, FTA 등의 이슈에 있어서 정책 선호의 차이는 정치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유권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형성에 있어서의 효과의 유무는 정치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 두 차원에서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현실적인 차원이다. 정치이념이 갖는 정책선호 형성에서의 효과는 대체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에게 있어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혹은 정치지식의 결여는 정치이념에 따른 일관된 정책선호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이념이 정책선호 형성을 뒷받침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므로, 이들은 피상적, 감정적, 최근의, 혹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에 의해 자신들의 정책선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원화, 탈 집중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정보의 이데올로기화 혹은 이데올로기적 프레이밍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치지식의 일반적 결여 및 그에 따른 선호의 비일관적 형성은 심각한 문제다. 여론의 유동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극적으로 프레이밍된 정보에 많은 유권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동성 증가, 이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세계시장의 개방과 지역경제 블록화로 인한 소득분할의 효과, 빈부격차의 확대, 고등교육의 확대와 고용 환경의 악화, 환경과 성장 사이의 긴장 등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다.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보수-진보의 대응 혹은 이슈 프레이밍은 일관된 원칙 보다는 정치공학 차원의 득실 계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데올로기적 정치 담론은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정치의 과열 혹은 정치적 냉소를 오간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럴수록, 문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터인데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이다. '정책'은 '정치'에 압도되고 이때의 정치는 '표'로 계산되는 선거 공학일 뿐이다. 그래서 정책전문가 제시하는 청사진 보다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산한 표 득실이 더 귀중한 판단의 준거가 된다. 정치 엘리트 차원의 정치 담론이 일관된 원칙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일반 대중들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중들의 혼동은 정보 검색과 취득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개

인들, 즉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개인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물론이거니와,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엘리트 및 언론의 태도다. 유권자의 선택은 결국 정치엘리트 및 언론이 제공하는 선택지(choice se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충분히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근거하여 일상적이지만 인상적인(impressive) 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및 분석 차원이다. 정책선호 형성이나 투표선택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통계모델에서 정치지식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지식은 모델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이것을 위해서는 설문 디자인에서부터 정치지식 측정을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정치지식은 정치이념이나 그 밖의 정치정향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이므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정치지식은 정치이념이 갖는 보수-진보의 방향성을 그것의 신념체계로서의 일관성 및 준거(anchoring)효과에 따라 변이시키는 힘을 갖는다. 요컨대 정치이념의 효과는 정치지식 수준과 더불어 고려되고 측정, 평가될 때 정확하고 의미 있게 검증될 수 있다. 관련하여 윤성이·이민규(2011)의 주장, 즉 “이념갈등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자기결정적인 주관적 이념성향을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는 점(의)[도]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의 이념성향을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구성’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 개인들의 자기의사 표현의 외부에서 연구자에 의해 ‘부여’된 이념성향을 개인들이 자신의 이념성향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요컨대 개인들의 이념정향이 일관된 정책 선호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치이념에 내재된 정치지식의 작용 때문이며, 따라서 정치이념 변수의 설명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외삽된 이념정향에 의한 주관적 이념변수의 대체 보다는 정치지식에 의한 보완이 더 적실한 방법이다.

투고일: 2012년 4월 13일

심사일: 2102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29일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정인·이지윤. 2003.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신아세아』 10권 3호, 5-30.
- 김남인. 2012. “세계최대 PR그룹 에텔만의 CEO 에텔만.” 『조선Biz』(1월 6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6/201201060153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6/2012010601538.html)(검색일: 2012. 4.19).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0권 3호, 6-31.
- 류재성. 2010. “한국 유권자의 정치지식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연구』 19집 1호, 45-70.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163-182.
- 윤성이·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층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권 3호, 63-82.
-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1998.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60, 634-652.
- Ackerman, B. and J. Fishkin. 2004. *Deliberation D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Althaus, Scott L. 1998. “Information Effects in Collective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545-558.
- Anderson, Robert, James Tilley, and Anthony F. Heath. 2005. “Political Knowledge and Enlightened Preferences: Party Choice through the Electoral Cycl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No. 2, 285-302.
- Bargh, John A. 1994. “The Four Horseman of Automaticity: Awareness, Efficiency, Intention,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R.S. Wyer, Jr. and T.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_\_\_\_\_. 1999. “The Cognitive Monster.” In Chaiken, Shelly and Yaacov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Bartels, Larry M. 1996. “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No. 1, 194-230.
- Bennett, Lance. 1993. “Constructing Publics and their Opinions.” *Political Communication* 19. No. 2, 101-120.
- Blumenthal, Sidney. 1980. *The Permanent Campaign: Inside the World of Elite Political Operatives*. Boston: Beacon Press.
- Brown, T. 1981. “On Contextual Change and Partisan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427-447.

- Carlsson, G. and K. Karlsson. 1970. "Age Cohorts and the Generation of Gener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710-718.
- Converse, Phili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s*.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69. "Of Time and Partisan Stabil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 139-177.
- Dalton, Russell J. 2002.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No.4, 1179-1206.
- \_\_\_\_\_.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herty, K. and J. Gimpel. 1997. "Candidate Character vs. the Economy in the 1992 Election." *Political Behavior* 19, 177-196.
- Druckman, James. 2004.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Com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Ir)relevance of Framing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671-686.
- Elshtain, J. 1982. *The Family in Political Thought*.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Finkel, Steven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No.4, 891-913.
- Fiorina, M. 2004.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Longman.
- Fiske, Susan T., Donald R. Kinder, and W. Michael Larter. 1983. "The Novice and the Expert: Knowledge-based Strategies in Political Cogn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No. 4, 381-400.
- Gamson, William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son, James L. 1992. "Alternative Measure of Political Tolerance: Must Tolerance be "Least-Like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 2, 560-577.
- Gilens, Martin. 2001. "Political Ignorance and Collective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2, 379-396.
- Hetherington, Marc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3, 619-631.
- Hibbing, J. and E. Theiss-Morse.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 A. 1997. *Running Scared: Why America's Politicians Campaign Too Much and Govern*

- Too Little*. New York: Free Press.
- Klingeman, Hans-Dieter. 1979.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s." In S. Barnes and M. Kasse et al., eds. *Political Actio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Krosnick, Jon A. and Donald R. Kinder. 1990. "Altering the Foundations of Support for the President Through Prim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No. 2, 497-512.
- Kuklinski, James H. 2002. *Thinking About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klinski, James H., Paul J. Quirk, David W. Schwieder, and Robert F. Rich. 1998. "Just the Facts, Ma'am': Political Facts and Public Opin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0, 143-154.
- Lau, Richard, and David P. Redlawsk. 1997. "Voting Correctl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3, 585-598.
- \_\_\_\_\_. 2001. "An Experimental Study of Information Search, Memory, and Decision-Making during a Political Campaign." In James Kuklinski, ed. *Citizens and Politics: Perspectives from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ighly, Jan. 1991. "Participation as a Stimulus of Political Conceptual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53, 198-211.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 Lodge, Milton and Ruth Han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No. 2, 505-519.
- Lodge, Milton and Kathleen McGraw. 1995. *Political Judgment: Structure and Proc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upia, Arthur. 1994. "Shortcuts versus Encyclopedias: Information and Voting Behavior in California Insurance Reform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No. 1, 63-76.
- Luskin, Robert,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No. 4, 856-899.
- Niemi, Richard G., Stephen C. Craig and Franco Mattei.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5. No. 4, 1407-1413.
- Nelson, Thomas E. 2004. "Policy Goals, Public Rhetoric,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66. No. 2, 581-605.
- Nelson, Thomas E., Zoe M. Oxley, and Rosalee A. Clawson. 1997. "Toward a Psychology of

- Framing Effects.” *Political Behavior* 19, 221-246.
- Neuman, W. R. 1986.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Knowledge and Opin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lfrey, Thomas R. and Keith T. Poole.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Ideology,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No. 3, 511-530.
- Price, Vincent. 1999. “Political Information.” In John P. Robinson, John Paul Robinson, and Lawrence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cademic Press.
- Price, Vincent and John Zaller. 1993. “Who Gets the News: Alternative Measures of News Perception and Their Implication for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57. No. 2, 133-164.
- Schreckhise, William D. and Todd G. Shields. 2003.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Contemporary U.S. Electorate Revisited.” *Social Science Quarterly* 84. No. 3, 596-612.
- Smith, Tom W. 1985. “The Polls: America’s Most Important Problems Part II: Regional, Community, and Personal.” *Public Opinion Quarterly* 49, 403-10.
- Smith, Eric R.A.N. 1989. *The Unchanging American Vo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niderman, P., R. Brody, and P. Tetlock. 1991. *Reasoning and Cho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iderman, P., J. Glaser, and R. Griffin. 1990.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In J. Ferejohn and J. Kuklinski, eds.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e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aber, Charles S. and Milton Lodge.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No. 3, 755-769.
- Tannen, D. 1994. *Gender and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etlock, Philip E. 1983.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No. 1, 118-126.
- Uhlaner, C. and Garcia. F. C. 2002. “Latino Public Opinion.” In B. Norrander and C. Wilcox, eds.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77–101.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The Myth of Massive Media Impact Revived: New Support for a Discredited Idea.” In Diana C. Mutz, Paul M. Sniderman, and Richard A. Brody eds. *Political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MI: Michigan University Press.

APPENDIX

---

〈중속변수 설문문항〉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탈미자주외교정책(15.7%) 2. 현상유지(45.9%) 3. 한미동맹의 강화(38.2%)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화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43.3%) 2. 강경 대처해야 한다(55.9%)

“핵포기 없이는 경제 협력 없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2.9%) 2. 반대(18.9%) 3. 찬성(59.5%) 4. 매우 찬성(17.3%)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0.2%) 2. 반대(7.1%) 3. 찬성(80.0%) 4. 매우 찬성(12.5%)

북미 지역들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0.4%)                      2. 그렇지 않다(919.4%)  
3. 그렇다(73.7%)                                4. 매우 그렇다(6.4%)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19.5%)                      2. 그렇다(972.4%)  
3. 그렇지 않다(8.1%)                        4. 전혀 그렇지 않다(0.0%)



### <정치지식 설문문항>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정답률 46.5%)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정답률 83.8%)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정답률 95.4%)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정답률 29.5%)

현재 국회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정답률 93.9%)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50만 명(21.6%)

2. 150만 명(정답, 45.3%)

3. 250만 명(25.1%)

4. 350만 명(6.4%)

ABSTRACT

---

## The Roles of Political Knowledge through Political Ideology in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Jae-sung Ryu |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oles of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knowledge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It is well known that political ideology functions as an anchor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nd that political knowledge plays an intervening role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s. Previous studies hold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on policy preferences depend upon the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More precisely,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re consistent and stable across policy issues among those who hold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My analysis supports this finding. Political ideology play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mong those who have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but not among those who shows low or medium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Based on this finding, I argue that political knowledge is a critical variable in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nd electoral choice. I also argue that it should be cautious in estimating the roles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Keyword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deology, Issue Framing, Intervening effects, Policy Preferences